

한국환경회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도시연대

일 자	2018. 9. 20(목)	담당자	송화원 (환경정의, 010-3331-8078) 남은경(경실련도시개혁센터 010-3730-1275)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 청와대 청원		

보도자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 일시/장소: **9월20일(목)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 내용:
 - (1) 취지 및 경과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2) 규탄 발언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 대표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 (3) 청원서 낭독
남은경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 (4)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연명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청원서>
청와대 전달
-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청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부터,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도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파주환경운동연합, 꽃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개발 대책 투기수요 배불리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추진 전면 중단하라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해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효과가 신통치 않자 9월13일 또 다시 좀 더 강경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논란이 되었던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공급 대책은 9월21일 발표하는 것으로 미루었다.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과 땅값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잘못된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였으나 그 아파트는 초고가 아파트가 되어버렸다.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 역시 3배나 뛰었다. 시의성 측면에서 정책 효과 또한 장담할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 택지지구지정, 준공, 입주 등의 과정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그린벨트를 풀어 지금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향후 5년 동안 서울의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는 5만5천 채인데 향후 신규 주택 공급은 연평균 7만2천채 정도 된다고 한다. 매년 공급되는 주택이 1만7천채나 수요를 초과한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도 연평균 22만1천호 정도지만 기존 분양물량,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정도,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은 26만3천호 정도나 된다,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울 사람 절반이 서울의 집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향하는 '원정 투자' 수요와 유주택자·다주택자의 추가 수요가 문제인 것이다.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에 주택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투기세력을 배불리고 개발지 주변의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크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 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과밀 개발되고 있다. 주택문제 또한 이러한 수도권 집중·과밀문제

의 연장에 있다. 결국 이러한 수도권 집중, 과밀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린벨트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의하면 홍릉 숲은 2km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미세먼지 해법의 하나로 도시 숲 조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92%가 국토 면적의 16.6%에 해당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산다. 그만큼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20~30㎡ 수준이고, 주요 도시 평균은 14㎡ 정도지만 OECD 통계(2014년)를 보면 수도권의 녹지면적은 인구 100만 명당 4.6㎡로 최하위권이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모두 합한 공원 면적도 국민 1인당 7.6㎡로 WHO 기준인 9㎡에 모자란다. 수도권은 계속해서 녹지를 늘려야 하고 공원을 꾸준히 조성해야 하는 곳임에도 그린벨트와 같은 도시 녹지는 계속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면서 우수 녹지가 아닌 논과 밭으로 이용되는 곳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한다. 그러나 녹지가 아니라는 것이 개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비록 우수한 녹지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도시연담화를 막는 그린벨트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나마 수도권 녹지의 마지노선이다. 집을 짓기 위해 비축해 놓은 곳도 아니며 원래 그런 용도로 지정된 곳도 아니다. 더구나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어 개발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2018. 9.20

강민주(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강은주(생태지평 연구실장), 강정은(건축사사무소에브리아키텍츠 소장), 고영석(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감사), 고희미(환경정의 집행위원), 광미순(환경교육센터 이사), 광종성(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권영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금창영(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기경석(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학술위원), 김경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광란(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생태강사), 김광일(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김국(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김금혜(진저티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금호(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

장), 김기호(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대표), 김남수(환경교육센터 이사), 김동필(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김동현(환경교육센터 이사), 김미정(성남환경운동연합 생태강사),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민수(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연구원), 김상연(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김선민(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김성우(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 김수경(성남환경운동연합 생태강사), 김숙례(성남환경운동연합 생태강사), 김승순(생명의숲국민운동 팀장),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영옥(환경정의 집행위원), 김영호(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회장), 김영호(생명평화기독교연대 공동대표), 김은진(전국귀농운동본부 감사), 김은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김연경(생태지평 이사장), 김일중(환경정의 이사장), 김재형(생명의숲국민운동 부장), 김전승(홍사단 사무총장), 김정민(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김정심(성남환경운동연합 생태해설사), 김주혜(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김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진배(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운영위원), 김진홍(환경정의 집행위원장),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김태호(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한배(서울시립대 교수), 김행란(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김현정(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형욱(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김혜경(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무국장), 김혜민(어반플랫건축사사무소 이사), 김홍철(환경정의 사무처장), 남미경(성남환경운동연합 생태강사),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국장), 남준기(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운영위원장), 남현주(성남환경운동연합 생태강사), 동종인(환경정의 공동대표), 류기석(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류종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고문), 류지수(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맹기돈(천연충현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맹지연(환경운동연합 국장), 명호(생태지평 부소장), 목영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문경은(성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문경자(성남환경운동연합 생태강사), 문광석(성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문성근(홍사단 국장), 문수정(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문태훈(환경정의 이사),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 민종덕(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박그림(녹색연합 공동대표), 박두규(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박봉정숙(한국여성단체연합 소장), 박성문(에너지나눔과평화 정책국장), 박숙현(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집행위원), 박은설(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종아(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주희(온공간연구소 팀장), 박창신(환경정의 집행위원), 박태현(환경교육센터 이사), 박현영(중앙대학교 연구전담교수), 반영운(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교수), 배경진(더바이크 편집장), 배성우(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집행위원),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봉영(전국귀농운동본부 감사), 백영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백은경(초록바람 사무국장), 백인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 백종연(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범인(참여연대 공동대표), 변창흠(환경정의 이사), 서경옥(경기환경운동연합 국장), 서순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부위원장), 서종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집행위원), 선상규(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선세갑(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성찬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학술위원), 소혜순(환경정의 이사), 소홍섭(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손혜숙(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운영위원),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신용환(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신철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현요(신영이엔지건축사사무소 대표), 양인목(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양지형(초록바람 운영위원), 양호(분당환경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연상준(전국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 오충현(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집행위원), 우양미(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원명(환경정의 공동대표), 원혜덕(환경정의 이사), 유미호(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 유병욱(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유서향(초록바람 운영위원), 유영민(생명의숲국민행동 사무처장), 유정옥(환경정의 집행위원),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은상(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윤인석(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이계숙(초록바람 운영위원), 이득현(수원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이미경(환경재단 상임이사), 이미애(초록바람 운영위원), 이미영(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이미정(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집행위원), 이범주(광고교통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복자(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영섭(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이원영(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집행위원), 이은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사장), 이의중(건축재생공방 대표), 이정현(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이제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이종태(환경정의 집행위원), 이준원(화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이지영(환경정의 집행위원), 이진경(소정당협동조합 공동대표), 이진천(전국귀농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진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찬진(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태현(성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이현용(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환의(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임성용(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임순례(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임종한(환경정의 공동대표), 임희지(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준영(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 장지만(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상임이사), 장성근(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문),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장점오(수원공정포럼 총무), 장지영(생태지평 협동처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명희(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정병준(분당환경시민의모임 공동대표), 정연돈(한국그린전략경영협회 회장), 정은아(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재욱(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정진(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운영위원), 정한철(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조강래(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조성천(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조우(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집행위원), 조은석(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조창익(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조현철(녹색연합 상임대표), 조형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차경훈(환경교육센터 이사), 차광주(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 채원호(가톨릭대학교 교수), 최강림(경성대학교 건축디자인학부 교수), 최대진(성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최동진(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최봉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선호(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운영위원), 최승현(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집행위원장),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최영식(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윤희(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학술위원), 최재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최준호(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중기(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상임대표),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한봉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허문화(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홍경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홍혜란(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황성현(성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황영숙(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강사), 황인중(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황정란(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 이상 215명(가나다순 정렬)